



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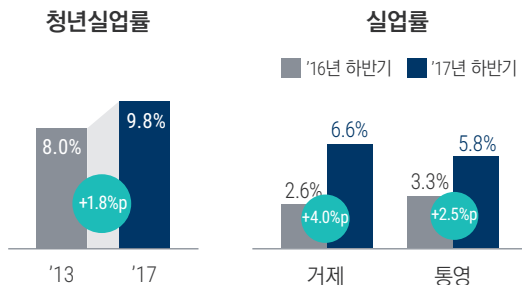
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

“ 정부는 4. 6(금) 청년일자리 대책, 구조조정지역·업종 대책의 일환으로 총 3.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, NABO는 추경안 편성의 경제적 효과, 세제지원 효과 및 개별 사업별 타당성 등을 심층분석하였다. ”

I. 총괄 분석

1.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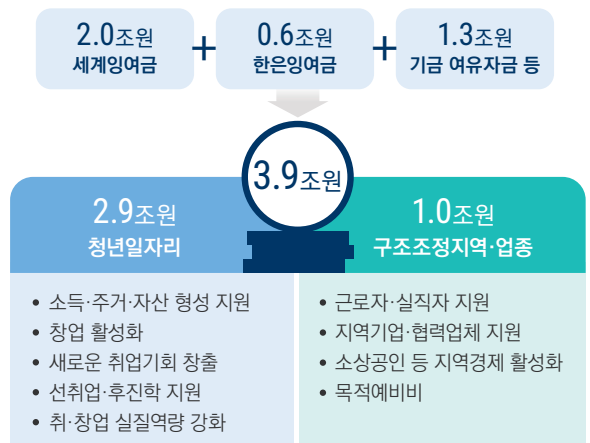
편성배경



청년층 실업률 악화 등
청년 고용여건 열악

구조조정지역 및 업종에
대량실업 발생 우려
(거제, 통영, 군산 등)

편성 규모 및 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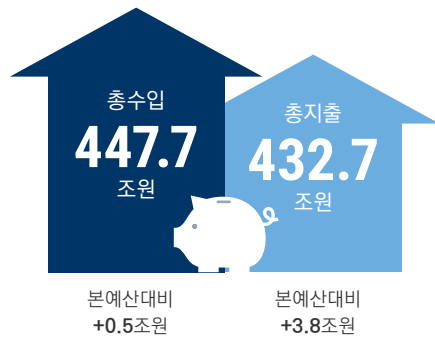


- 소득·주거·자산 형성 지원
- 창업 활성화
-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
- 선취업 후진학 지원
- 취·창업 실질역량 강화

- 근로자·실직자 지원
- 지역기업·협력업체 지원
-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
- 목적예비비

2. 재정총량

총수입 및 총지출



재정수지 및 국가채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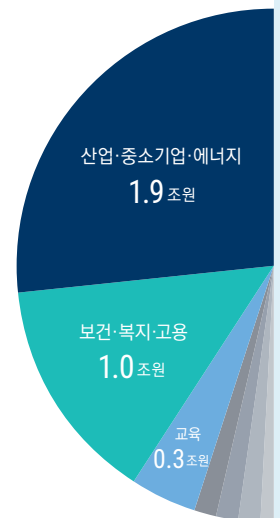


3. 분야별 자원배분

12대 분야 추경안 현황



분야	본예산(조원)	추경안(조원)	증감(조원)
1 보건·복지·고용	144.7	145.7	1.0
2 일반·지방행정	69.0	69.1	0.1
3 교육	64.2	64.4	0.3
4 국방	43.2	43.2	-
5 농림·수산·식품	19.7	19.8	0.05
6 R&D	19.7	19.7	0.02
7 공공질서·안전	19.1	19.1	-
8 SOC	19.0	19.1	0.1
9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	16.3	18.2	1.9
10 환경	6.9	7.0	0.1
11 문화·체육·관광	6.5	6.5	0.03
12 외교·통일	4.7	4.7	0.01
총지출	428.8	432.7	3.8



※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, 지역기업·협력업체 지원, 산단 환경개선 등
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크게 증가

※ 추경 증액규모가 크지 않아 본예산 대비 총지출의 분야별 배분에는 큰 변화가 없음

Ⅱ.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항 분석

1. 경제여건 및 경제적 효과 분석

국내 경제여건

- 양호한 세계경제 여건에 힘입어 국내 경기 회복세
- 고용여건의 개선 미흡
 - 2017년 실업률 3.7%, 청년실업률 9.8%로 높은 수준 유지
 - GM군산공장 가동중단, 조선업 구조조정 가능성 등의 여파로 전남, 울산, 경남 등 지역경제 위축

추경의 거시경제적 효과

2018년 경제성장률 제고효과



2018년 취업자 수 증가율 제고효과



- 취업자 수 4.0~4.3만명 증가 예상
- 청년일자리의 경우 추경을 통한 단기적 지원을 넘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병행 필요

2. 세제지원 효과 및 재정건전성 분석

세제지원 효과

- 청년일자리 분야 세제지원으로 연평균 9,166억원 세수 감소 추정
 - 34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추가 감면(감면율 70% → 100%)
 - 연간 소득세 7~28만원 추가 감면 혜택
 -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장려금 만 30세 미만으로 대상 확대
 - 연간 총급여 1,300만원 이하 1인당 최대 85만원 ↑, 평균 45만원 ↑
 - 기업의 노동비용 감소 효과 : 청년고용증대세제 확대
 - 중소기업 1인당 7.9% ↓, 대기업 1인당 0.3% ↓

재정건전성

- 금년도 예산 초과세수의 활용을 위한 세입경정이나 추가 국채발행 없이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
- 다만, 일부 대규모 사업이나 장기 계속 사업 등은 향후 수년간 재정부담 우려

3. 청년 일자리 대책 사업 분석

소득·주거·자산 형성 지원	- 고용 창출 지원 - 소득·자산형성 지원 - 주거비·교통비 지원 - 근무환경 개선 지원	1.7조원
창업 활성화	- 창업자금, 사업서비스 지원 - 민간주도 창업 지원	0.8조원
새로운 취업기회 창출	- 지역 및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-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	0.2조원
선취업·후진학 지원	- 고졸 취업장려금 -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	0.1조원
취·창업 실질역량 강화	- 미래 핵심인재 육성 - 군 장병 취업 지원	0.1조원
총규모		2.9조원

- 청년 일자리 대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병행될 필요
 - 한시적 재정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과 함께 추진될 필요
-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재정투입의 효과성 검토 필요
 - 추경안에 21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6,177억원 신규 편성
- 일부 사업은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 검토가 요구되며, 추경의 연내 집행을 위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

4. 구조조정지역·업종 대책 사업 분석

근로자·실직자 지원	- 근로자 고용 유지·생계 지원 - 기술인력 국내 전직·재취업 - 비숙련 근로자 훈련·채용 -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	0.1조원
지역기업· 협력업체 지원	- 경영안정자금 지원 - 산업다각화 지원	0.4조원
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	- 소상공인·전통시장 지원 - 지역 투자·관광·인프라 지원	0.2조원
목적예비비	구조조정 위기지역·업종 확대 등 불확정 소요 대비	0.25조원
총규모		1.0조원

-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어 재정지원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
 - 기술인력 국내 전직·재취업 사업은 퇴직인력 수요기업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
 - 특례보증 공급 관련 적정 부실률 산정 및 관리 필요
 - 고향사랑상품권 신규발행 자치단체에 대한 도입 절차 지원, 적극적인 홍보 등 사업효과 제고 필요
- 목적예비비는 심사과정에서 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가급적 예비비보다 일반 예산 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